

7.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년 10월 25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자치행정국장)
- 회부일자 : 2019년 10월 31일
- 상정일자 :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년 11월 22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 내용

- ‘대장가액’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대장가격’으로 통일하고 조례에서 정한 관사의 범위에 소유 및 임차하는 공용주택까지 포함하여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고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유재산 운영 중요사항 등을 매 회계연도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 330㎡이하 또는 대장가격 5천만원이하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바로 잡았음.
- 이 밖에도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을 개선하고 초지법에 따른 대부료 효율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 매각대금 평가방법 등 개별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곽영구)

- 조례안 개정의 목적은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법 제11조¹³⁾에서는 재산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범위 이탈에 해당 된다는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 사항¹⁴⁾을 반영한 것임.

- ▶ 안 제7조에서는 법 제92조¹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¹⁶⁾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공유재산 운영 중요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는 상위법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임.

13)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14)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41(2019. 4. 30.)호

15)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6) 제52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개정된 가격"이란 법 제46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안 제28조**에서는 「초지법」 제18조17)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규정하였음. 이는 개별법에서 공유지의 대부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
- ▶ **안 제30조**에서는 토석채취료 산정기준을 m³당 원석시가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되어있던 규정을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고, 기타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음.
- 토석의 채취료는 통상적인 사용·대부가 아닌 매각에 해당하므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는 매각절차에 따르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¹⁸⁾을 반영한 것임. 참고로 대구시의 경우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재산은 없음.
- ▶ **안 제31조**에서는 건물대부료 산출 시 부지평가액을 층별로 감경 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을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¹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7)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8)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41(2019. 4. 30.)호

19)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41(2019. 4. 30.)호

— <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안부 고시) 별표3 > —

○ 건물 공용면적 산출 산식

$$\frac{\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times \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부지 공용면적 산출 산식

$$\frac{\text{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times \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 **안 제40조**에서는 제8항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자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²⁰⁾에 따른 농업인으로 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음.
- ▶ **안 제50조**에서는 “관사”의 용어 정의를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으로 규정하였음.
 - 이는 현행 조례에서 소유하는 공용주택으로 규정된 관사의 범위를 임차하는 공용주택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관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 대구시 관사 운영 현황 : 보유 5개 / 임차 12개
- ▶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2019년 1월부터 추진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 정비에 따른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20)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